

[종합·국제]

정부, 美 대선주자 접촉 나섰다

외교부 1차관 방미 매케인·오바마측 인사들과 잇단 만남

정부가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를 계기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든 미국 대선주자들의 접촉을 강화한다.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존 네그로 폰테 미 국무부 부장과 워싱턴에서 2~3 일(워싱턴 현지시간) 양국간 차관급 전략대화를 갖기 위해 1일 오전 출국했다.

양국 전략대화에서는 지난달 6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논의와 북핵 및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양국의 정책 방향이 주로 협의된다.

권 차관은 또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만나 북핵 문제와 관련, '완전하고 정확한 검증 이행 계획서' 마련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략대화의 특성상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 협의보다는 정책 방향을 공유하면서 양국 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특히 이번 방미를 계기로 2일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 원진영, 3일 민주당 대선후보인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 진영 인사들을 각각 접촉, 대

북 정책과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미국내 주요 연구소 및 학계의 한반도와 동북아 전문가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양국간 제반 현안과 향후 미국의 대외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미국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는 만큼 양측 전영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외교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은 향후 차기 미국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속적인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DJ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풀어야"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1일 "북핵 6자회담에서 합의한 동북아 안보기구가 구성돼 한반도가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중국·러시아·일본과도 친선 관계를 유지하는 '1동맹 3친선 관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1일 발간된 격월간지 '민족화해' 최신호(9~10월호)에 실린 민족화해협의회 10주년 특별대담(대담자 정세현 대표상임의장)에서 "동북아 안보체제와 통일문제를 다룰 때 남한과 북한, 미국의 3자 협력체제가 잘 돼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이러한 생각을 밝혔다.

또 그는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전 정권에서 한 것을 다

을 정권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나라를 신임하겠는가"라며 "정체된 남북관계를 풀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제3의 합의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의 '잃어버린 10년 논란'과 관련 "여권이 사용하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무엇보다도 현 정부 사람들이 야당을 좌익시하고 애국심이 부족한 사람으로 몰려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의 권리를 봉쇄하려고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한중일 핵 학라인 구축

원자력 사고 연락 시스템

한중일 3국이 원자력발전소 등의 핵 관련 시설에서 화재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로 긴급 통보하는 정부간 연락 시스템을 창설하는데 합의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1일 보도했다.

3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원자력발전소 건립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사고 발생시 인접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오는 5일 도쿄에서 이런 내용의 협정을 조인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3국간 연락 시스템은 '동북아시아 원자력안전 상급 포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한국의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일본 경제 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 중국 환경보호부 국가핵안전국이 참가가 된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연합뉴스



미국 본토에 초강력 허리케인 구스타브가 1일(현지시각) 미 본토에 상륙,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텍사스 주 타일러 하비 허 컨벤션센터에 수백여명의 주민들이 대피해 있다. /연합뉴스

美 남부 수백만명 대탈출

초대형 허리케인 '구스타브' 새벽 상륙...공화당 全大 축소

초강력 허리케인 구스타브가 1일(현지시각) 미국 걸프 해안지역에 상륙,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면서 미국이 긴장하고 있다.

3년 전 카트리나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뉴올리언스에는 강제 대피령과 통행금지 조치가 취해졌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공화당은 전당대회 계획을 긴급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지난달 31일 미국 국립하리케인센터에 따

르면 구스타브는 이날 쿠바의 서부지역을 지나면서 이미 카리브해 지역에서 80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고 시속 193km의 강풍을 동반하고 시속 27km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

이번 구스타브의 영향권은 루이지애나에서부터 텍사스, 알라배마, 플로리다 주까지 800km에 이르러, 이들 지역에 사는 1천1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구스타브의 위력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또 구스타브로 인해 6m에 이르는 파고와 380mm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초강력 허리케인 구스타브는 이날 멕시코 만을 지나면서 세력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다소 누그러졌지만 3년 전 카트리나의 피해가 재연되면서 미국이 긴장하고 있다.

3년 전 카트리나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뉴올리언스에는 강제 대피령과 통행금지 조치가 취해졌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공화당은 전당대회 계획을 긴급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지난달 31일 미국 국립하리케인센터에 따

르면 구스타브는 이날 쿠바의 서부지역을 지나면서 이미 카리브해 지역에서 80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고 시속 193km의 강풍을 동반하고 시속 27km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

이번 구스타브의 영향권은 루이지애나에서부터 텍사스, 알라배마, 플로리다 주까지 800km에 이르러, 이들 지역에 사는 1천1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구스타브의 위력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또 구스타브로 인해 6m에 이르는 파고와 380mm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전당대회 계획을 축소했다.

공화당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새라 페일린 알래스카 주지사도 이날 비상사태가 발령된 미시시피 주를 방문해 주 재난지휘통제센터를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공화당 전당대회 준비위 관계자들은 또 이번 전당대회를 애초에 계획했던 축제방식 대신 적십자와 다른 구호기관에 전달하기 위한 마리온 모금행사로 전환해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에게 구호기금을 전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리케인 구스타브가 쿠바를 통과해 북상하면서 피해상황도 속속 보고되고 있다.

쿠바서부의 로스 팔리치오스에서는 8월31일 하루 사이에 상당수 목조 가옥이 부서졌으며 교회와 학교 건물, 양계장과 강풍을 동반한 호우로 파괴됐다. /연합뉴스

日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표기

한·일 대립 고조될 듯

일본 방위성이 발행하는 2008년판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일본측 표기 문제로 한일 관계가 다시 불거질 위기다.

하지만 양국 정부가 파문 확산을 경계하면서 긴밀한 협의에 나서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일본 방위성은 오는 5일 각료회의에서 의결할 2008년판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키로 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방위성은 이날 오후 각국 무관들을 상대로 실시한 방위백서 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성은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 고유

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전문 입장을 유지키로 했다고 각국 무관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4년 연속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일본측은 앞서 이날 오전 한국측에 방위백서의 내용을 별도로 사전 설명했고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

서에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술하면서 발생한 한·일간 대립이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방위백서는 양방성이 집권 자민당 등 정치권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5일 각료회의에서 원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독도 주변 수역의 방위력 강화나 한국의 불법 접두 주장 등을 담아야 한다는 경고론도 제기됐지만 일본 정부는 이달 중 일본내 개최될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감안해 기존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방위성은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 고유

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전문 입장을 유지키로 했다고 각국 무관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4년 연속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일본측은 앞서 이날 오전 한국측에 방위백서의 내용을 별도로 사전 설명했고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

美 공화 全大, 부시보다 강경한 북핵 폐기 정강정책 채택

미국 공화당은 1일 미네소타주 세인트

플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북한에 원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 를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정강정책을 채택한다.

공화당은 존 매케인 대선 후보의 국정

운영의 토대가 되는 정강정책에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해 "미국은 북한의 핵 확산 활

동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아울러 핵 프로

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돌릴 수 없는 해체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

는 표현은 조지 부시 행

정부가 작년 초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사실상 폐기한 용어다.

따라서 매케인의 공화당이 'CVID 용어'

정강정책에 명시한 것은 부시 행정부보다

더 강경한 대북정책을 전개하겠다는 차별

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공화당은 정강정책에서 북한을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광적인 독재국'

라고 강력히 비난해 집권할 경우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칠 것임을 거듭 예고했다.

공화당 정강정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등 기존에 합의된 FTA를 의회가 즉각 토론하고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명시

했다. /연합뉴스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 무 사 권 숙 원
공인중개사
김 갑 속

[주] 옥션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친절상담
문의 062)222-8446
H.010-3666-8446

▶ 균린시설(근린주택/상가)

지역 소재지 대/건(㎡) 갈증가 최저가 비고

서구 월드타운 580/2538 14억 400만 79억2000만 원에 88평대

금강동 215/498 42억 200만 54억2000만 원에 108평대

금강동 201/133 3억 18억3000만 원에 60평대

화곡동 112/215 16억7000만 11억8000만 원에 100평대

화곡동 146/177 82억500만 65억6000만 원에 150평대

화곡동 143/852 9억7000만 58억2000만 원에 150평대

화곡동 201/256 2억 2억2000만 원에 80평대

화곡동 130/326 2억6000만 102억2000만 원에 150평대

화곡동 187/647 14억7000만 92억7000만 원에 200평대

화곡동 524/210 3억8000만 18억4000만 원에 150평대

화곡동 398/231 2억8000만 18억4000만 원에 150평대

화곡동 2